

“전두환 불법재산 1조원 육박... 자녀들·친인척에 숨겨놨다”

민주 전병헌 원내대표 당 차원 추정액 조사

재벌총수에 5000억 수수...친인척 명의까지 9334억

“전두환 추징법 거부는 국가와 국민 거역하는 발상”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불법으로 조성한’ 재산이 약 9334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정당한 전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 추계치를 밝히며 ‘전두환 추징법’의 6월 국회 처리를 거듭 주장했다.

그는 “(전 전 대통령은) 88년 퇴임하며 청와대에서 1000억원을 챙겼으며, 30명의 재벌총수로부터 5000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며 친인척 명의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합치면 약 933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불법조성된 재산의 ‘은닉처’로 3남 재만 씨와 관련해서 ▲장인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이 보유한 160억원 상당의 국민주택 채권 ▲한남동 100억원대 빌딩 소유 의혹 ▲장인 이 회장과 공동소유한 미국

캘리포니아의 1000억원대 와이너리 지를 지목했다.

이어 장남 재국씨의 경우에는 시공사 자산 296억원(매출 442억원), 2005년 배우자와 딸 명의로 연천군 일대 땅 5만여㎡에 조성한 허브농원(시가 250억원), 시공사 본사 터 및 과주 출판단지 터 등 500억원대 부동산 산 및 건물 소유(추정치) 등을 거론했다.

차남 재용씨와 관련해서 아버지로부터 400억원 등도 원래 자금을 증여받은 의혹, 2000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자산 약 425억원(2012년 기준)을 은닉재산으로 의심했다. 또한, 차남 이창석 씨 등 친인척 재산 400억원 등도 원래 자금의 출처는 전 전 대통령이었을 것으로 봤다.

전 원내대표는 “2004년 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자녀 명의 부동산을 처분해 현금



화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재국씨의 시공사 출자금 어디서 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추징금액은 이명박 정부의 4만7000원보다 많아

민주당 주장 전두환 전 대통령 불법 재산

관련자	의혹	금액
전두환 전 대통령	1988년 퇴임하며 챙김	1천억원
전두환 전 대통령	재벌 총수 30여명으로부터 뇌물 수수	5천억원
3남 재만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	100억원
이희상 동아원그룹 회장 (재만씨 장인)	국민주택채권	160억원
재만씨와 이희상 회장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운영 의혹	1천억원
장남 재국씨	시공사	300억원
장남 재국씨	2005년 딸과 아내 명의로 경기도 연천군 일대 땅 5만여㎡ 매입, 허브빌리지 조성	250억원
장남 재국씨	시공사 본사터, 과주출판단지터, 시공이트 스페이스터 등 부동산·건물 소유 추정	500억원
장남 재국씨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설립, 자녀 명의의 부동산 처분해 현금화	30억원 이상
차남 재용씨	부친으로부터 국민주택채권 증여	169억원
차남 재용씨	2000년 설립한 부동산 개발회사 비엘에셋	425억원
차남 재용씨	전 전 대통령 차남 이창석씨가 보유한 오산땅 132만㎡를 사들인 뒤 2007년 매각	400억원
계		9천334억원

야 하고 이를 위해서 ‘전두환 추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확고한 법무장관이 해당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전두환의 불법 비자금에 추징하자

고 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착각이고 잘못”이라며 “오호러 위헌이라는 생각 자체가 국가와 국민을 거역하는 위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민 10명중 7명 이상 “전두환 추징법 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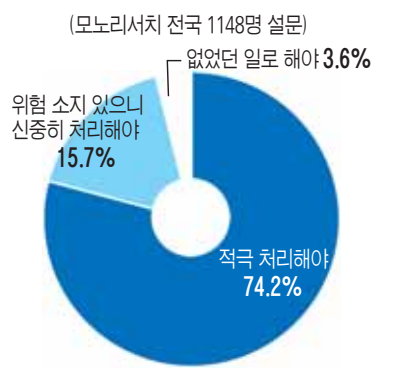
모노리서치 전국 1148명 설문...“없던 일로 하자” 3.6% 뿐

최근 국회에서 입법 여부를 놓고 논의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법(이하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는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14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표본오차 ±2.89%포인트 신뢰수준 95%)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2%가 “박근혜 대통령도 환수 의지를 밝힌 만큼 적극 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특정인 겨냥 및 위헌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15.7%),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일단 일로 해야 한다”(3.6%) 순이었다. ‘적극 처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83.3%)와 20대(76.9%)에서 가장

전두환 추징법 여론조사



높았고, 지역적으로는 전라권(79.5%)과 충청권(75.4%)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신중 처리’는 60대 이상(17.2%)과 20대(17.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북권(20.9%), 경기권(17.2%)이 비교적 높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노태우 부인 김옥숙씨 “동생·전 사돈에 맡긴 재산 꼭 환수”

검찰에 탄원서 보내

검찰이 ‘정의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고액 벌과금 미납자에 대한 집행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노태우(81) 전 대통령이 미납 추징금 완납 의사를 밝혔다.

14일 대검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78)씨는 전날 오후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추징금 집행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탄원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씨와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 맡겨진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

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균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828억원을 확정받았다. 현재까지 2천628억원 중 2397억원이 국고에 귀속돼 230억원 가량이 미납됐다.

노 전 대통령측은 재우씨와 신 전 회장에 대한 추징금만 제대로 회수하더라도 추징금 완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전

회장에 230억원, 재우씨에게 120억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검찰은 지난해 말까지 재우씨로부터 모두 69차례에 걸쳐 52억7천716만원을 추심해 회수해 70억원 가량이 남아있다. 재우씨측이 소유한 오로라 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약액가 5000원)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200여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추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반면 신 전 회장으로 부터의 회수액은 5억1000만원으로 전체 액수의 2.2%에 불과한 상태다. /연남뉴스

국회 상임위 입법전쟁...“전두환 추징법” 등 주목

6월 임시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17일부터 본격화되면서 주요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의 입법전쟁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민주화와 ‘갑을 관계법’이 대거 풀려있는 국회 정부위와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다룬 법사위·기재위, 통상임금을 비롯한 노동 관련 현안이 집중된 환경노동위,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현안인 운영위가 대표적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위=여야가 큰 틀의 경제민주화 입법에는 공감하지만 새누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위조절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이를 경제민주화 의지 후퇴로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정무위는 이미 지난 14일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대리점에 대한 제품 밀어내기 등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된 ‘갑을 관계법’,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도 정부위의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이 ‘을(乙)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고 갑을 관계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

은 ‘갑을 상생’을 강조하며 중점 법안으로 설정한 111개 법안 가운데 갑을 관계법을 빼 온도를 보이고 있다.

◇기재·법사위=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법안도 기재위와 법사위를 중심으로 여러 건이 제출된 상태다.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개정안은 전·현직 대통령 및 국무위원이 추징 시효 연장을 위해 소액의 추징금을 내는 편법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추징 대상자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인지하고서도 가족 등이 이를 취득할 경우 해당 가족 등으로부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현재 새누리당은 소급적용이나 가족 재산 추징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속한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기타 상임위=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무더기로 제출된 환노위도 여야간 논쟁으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운영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하는 국회 세신법안 처리 여부, 외교통일위원회의 북한인권법, 국방위원의 군 가산점 부여 여부 등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특별한 기회

광주 MBC 에어드림 스피치 아카데미에서 이루십시오

박동한
광주 MBC 아나운서, 문화사업국장, 행사팀대 감독

양준
광주 MBC 아나운서

황정숙
KBC 광주방송 작가, 리포터, KBS 광주방송총국 MC

장문정
광주 MBC MC, 리포터, 광주교통방송 MC

최이은비
TBN 광주교통방송 MC, 리포터, 광주 MBC MC, 리포터

최인호
TBN 광주교통방송 MC, EBS 교육방송 리포터, 전남대 평생교육원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

방송진행자 | 일반인 스피치 | 방송구성작가 | 디베이트(토론) 교사 | 대학생 취업 면접 | 힐링스피치 클럽

교육문의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89(대리동, 한예종빌딩 3층) (주)알과 사람 / 전화: 062-234-0800 / 팩스: 062-234-0801 / 홈페이지: www.lnhac.com

빛의만평

- 김중두

탄추법 이대우

독이나 깔줄알지, 원...